

# 정책지원관제도의 주요 이슈와 운영 개선방안

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주 희 진

## 연구배경 및 목적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의정역량 향상 방안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됨
- 운영 3년 차가 되는 정책지원관제도이지만,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미흡한 가운데 많은 지방의회에서 제도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
  - 정책지원관의 구체적인 사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
  - 또한 조례로 정하고 있다 하여도 「지방자치법」 등과 같이 포괄적인 수준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
- 이에 본 연구는 정책지원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,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정책지원관제도의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

## 정책지원관제도의 주요 이슈 및 운영 효율화 방안

### ① 채용

- 현행 정책지원관 채용요건의 주요 문제점
  - 지나치게 엄격한 학위 규정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정책지원관 진입이 어려움
  -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우대하는 방안이 부재함
  - 정책지원관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채용요건으로 적합한 인재 채용 어려움
  - 따라서 정책지원관제도 취지에 맞는 유연한 채용 요건 및 선발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-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을 우대할 수 있는 채용요건 도입 방안
  - 예컨대, 전문성에 따라 임용 등급을 차등화하는 방안으로서 학위 취득 여부에 따라 전문성의 차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
  -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별도의 채용 요건으로 할 경우, 청년취업 제고 및 지역 내 취업방안과 연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, 지방의회 및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력이 부재한 인력이 채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고민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

| &lt;표 1&gt; 전문성을 우대하는 정책지원관 채용요건(안) |

임용예정 부서	임용분야 (응시분야)	임용등급 (응시직급)	자격기준
의회사무처	정책지원관	지방행정주사 (일반임기제)	(경력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. <u>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</u> 2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.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		지방행정주사보 (일반임기제)	1. <u>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</u>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※ 관련분야 실무경력

- 국회, 지방의회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출자·출연기관, 연구소(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포함), 법인,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서 지방자치, 지방행정, 법·제도 연구·조사·분석 및 법제, 법률해석 등 근무경력

• 지방의회의 실무경력을 고려한 채용요건 도입 방안

- 다만, 지방행정주사보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자의 지방의회 유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대학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방의회 전문가과정, 지방의회 전공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
- 이러한 과정을 이수한 경우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우대사항을 명시하여 대학을 졸업한 청년인재의 지방의회로의 유입을 독려할 수 있음

| &lt;표 2&gt; 실무경력을 고려한 정책지원관 채용요건(안) |

임용예정 부서	임용분야 (응시분야)	임용등급 (응시직급)	자격기준
의회사무처	정책지원관	지방행정주사 (일반임기제)	(경력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. <u>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u> 2.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.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		지방행정주사보 (일반임기제)	1. <u>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</u> 2. <u>학사학위 취득 후 1년</u>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.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(우대사항) 학사학위 취득 이전 지방의회 인턴십 등의 관련분야 경력은 실무경력 기간으로 인정

※ 관련분야 실무경력

- 국회, 지방의회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출자·출연기관, 연구소(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포함), 법인,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서 지방자치, 지방행정, 법·제도 연구·조사·분석 및 법제, 법률해석 등 근무경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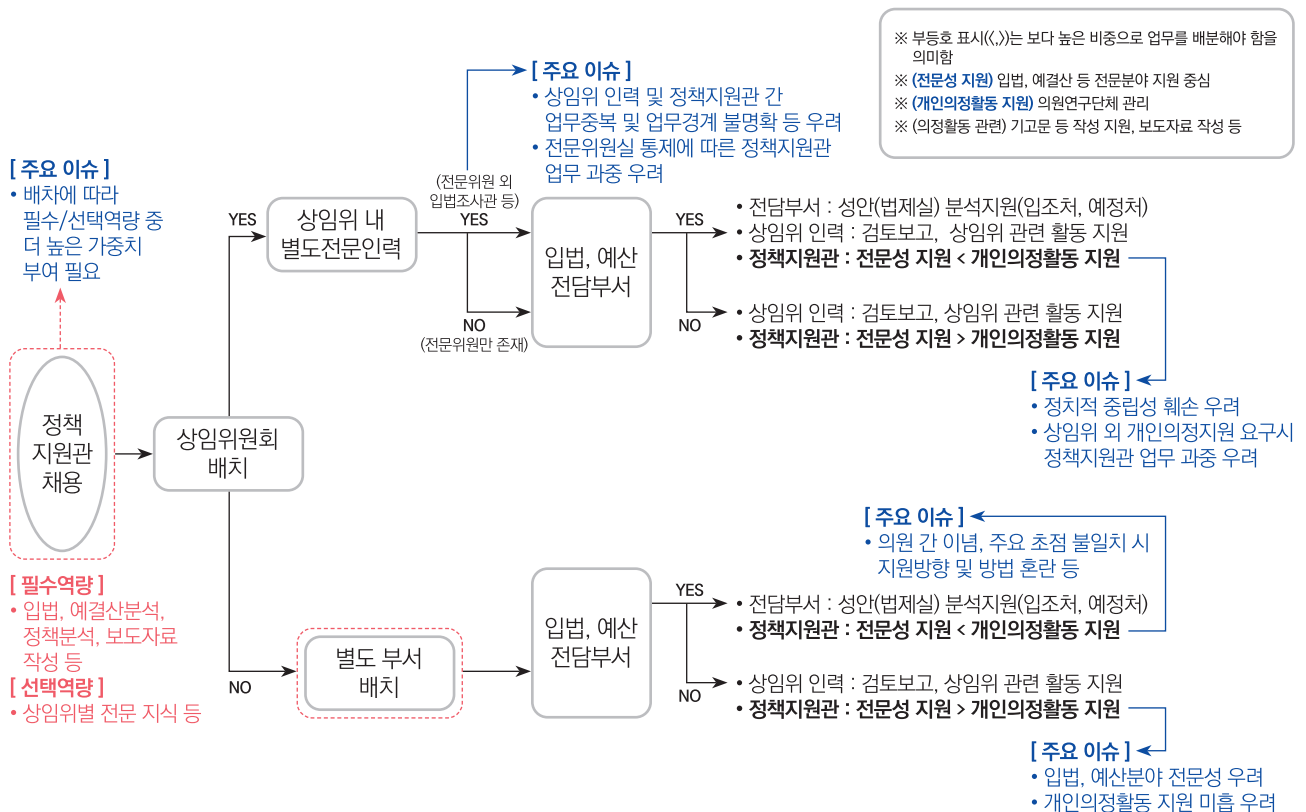
• 채용단계에서부터 정책지원관의 필수/선택 역량을 고려한 선발방식 마련

- 정책지원관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구분하여 이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
  - > (필수역량) 입법지원을 위한 성안역량, 예·결산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기초지식 및 재정분석 능력, 집행부 견제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분석역량, 보도자료 등 의정활동 홍보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작문역량 등
  - > (선택역량) 정책지원관이 상임위원회에 배치될 경우 혹은 사무처에 배치되어도 분야별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활용될 수 있는 역량으로 기획행정, 교육, 농해양수산, 경제환경, 건설소방, 문화복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

## ② 배치

- 현행 정책지원관 배치의 주요 문제점
  - 현재 많은 지방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을 별도 부서, 입법담당관 내 또는 전문위원실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
  - 각 배치 방법에 따라 여전히 크고 많은 문제점(관리부실, 기존인력과 업무중복, 성안지원과 검토지원의 중복 등)이 발생하고 있음
-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
  - 지방의회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지원관의 주요 직무 및 직무의 우선순위를 차등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음
  -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존 전담부서와 인력의 존재 여부 및 배치에 따른 주요 이슈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

〈그림 1〉 지방의회 여건을 고려한 정책지원관 맞춤 채용 및 배치방안



## ③ 직무

- 현행 정책지원관 배치의 주요 문제점
  -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므로 이를 일일이 조례 등에 명시하기는 매우 어려우며, 명시되지 않은 직무에 대한 갈등이 지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음
  - 따라서, 정책지원관이 수행할 수 없는 직무를 명시하고 이 외의 범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정책지원관의 직무로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

〈표 3〉 정책지원관이 수행할 수 없는 직무(예시)

수행할 수 없는 직무(예시)

- 지방의회의원 개인 SNS 계정 관리
-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직접 작성
- 전문위원실 행정사무 처리 지원
- 의정활동과 무관한 외부 활동 지원
- 표창장 제작 및 관리, 의원 개인의 수상 공적조서 작성, 의원 개인의 수상 또는 응모 목적의 신청서 작성
- 지방의회의원 개인 및 소속 정당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등 작성
- 지방의회의원 개인 일정(지역구 행사, 지역구민 민원 처리 등) 보좌
- 지방의회의원 지역 행사(의정활동 무관) 의전·수행

※ 출처 : 행정안전부(2024). 「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」

#### ④ 지휘·감독

- 정책지원관에 대한 지휘·감독 규정 현황
  - 정책지원관의 지휘·감독권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, 행정안전부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장의 권한이라는 입장임
- 상위직급에 의한 업무관리 권한 부여
  - 일부 지방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의 지원한 업무의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함
    - > 그러나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접 지시를 받는 정책지원관과 상급자의 검토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절차상의 하자, 내용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
    - > 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의정활동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 내용에 대한 검토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
  - 상급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정책지원관의 업무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
    - > 일부 정책지원관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경우 적절한 배분 등을 통하여 균형 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수 있음

※ 본 기고문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이며,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.